

[종합·해설]

도청 별관 10인 대책위 '1년 갈등' 끊을까

박광태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으로 구성

"7월15일까지 결론"... 양측 전권 위임 등 관건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10명이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1년여 동안 지역사회에 갈등 요인이 돼온 도청 별관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선출직으로서 광주 시민의 대표성이 참작돼 구성된 10인 대책위원회들은 지난 3일 서구 라마다 호텔에서 3시간여 회동을 갖고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안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과 박광태 시장, 강박원 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10인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정부총리와 관련단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문제해결 방향은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 ▲대책위 활동시한은 오는 7월15일까지로 하되, 결론을 도출한다 ▲조영택 국회의원, 박광태 시장, 강박원 시의회 의장을 3인 간사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책위 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5월 단체가 대책위 활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책위 결론이 소용이 없어진다"며 "양측이 대책위 결정에 동의한

재의 전권을 위임받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도청 별관 문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자들이 대책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책위 활동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 중인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지난 2월 박주선 의원의 주장을 거쳐 도출된 추진단과의 합의사항을 거부하고 다시 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5월 단체들은 추진단과의 협상장 구로서 박의원에게 중재역할을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주선 의원이 이날 모임에서 "정부와 관련단체가 대책위 활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책위 결론이 소용이 없어진다"며 "양측이 대책위 결정에 동의한

다는 의견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국책사업의 결정권을 자체제작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5·18유족회와 부상자회도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책위가 시민의 뜻을 따라 (별관문제를) 결정하겠나는 합의대로 양측의 의견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청취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면서도 "대책위가 또 다시 옛 전남도청 별관을 철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과 수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를 바란다"고 경계했다.

대책위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대책위 모임을 끝낸 뒤 가진 기자회견에

서 "양측에 전권의 위임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대책위 활동시간인 오는 7월15일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10인 대책위는 정부 또는 5·18 관련단체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책위 해법=시민여론'을 명분 삼아 반발 세력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여론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책위가 전권위임을 이양받는 것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했을 경우 양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됨은 물론 별관문제가 또다시 안간힘으로 빚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협 문화수도 조성위원회는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별관문제의 전면에 나선 것은 반기운 일"이지만 대책위가 추진단·5월 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내지 못하고 전권을 위임받지 못할 경우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박정옥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청 별관 철거 문제

이달까지 반드시 해결

정수만 5·18유공자유족회장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4일 "이달 말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광주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유족회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음해성 보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도청 별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책임 있는 자세로 사퇴를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다만 일부 회원들에게 이달 말까지 유족회 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을 선임해 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이미 난 지난해 2월 말로 회장직이 만료된 상태이며, 회원들의 뜻에 따라 직무대리 형식으로 회장직을 유지해 왔다"며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나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광주시와의회, 언론, 일부 5월 관련 단체 등이 바로 그들"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특히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나를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

후임 검찰총장 누가 거론되나

권재진 서울고검장·명동성 연수원장 물망

문성우 대검 차장·김준규 대전고검장 등도 거명

임채진 검찰총장(57·사법시험 19회)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후임 총장을 둘러싼 하마평이 벌써 무성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총장의 사퇴는 시기만 문제였지 기정 사실화했던 데다 사의를 만류했던 청와대도 임총장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이다.

임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중도 사퇴한다는 점에서 차기 총장은 당장 동요하는 조직을 주스르고, 대외적으로 정치적 편향 시비에서 벗어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이러한 난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후보로는 임 총장보다 사법시험 1~2년 후배인 시사 20~21회 출신 검찰 내부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간혹 예외는 있었지만 검

찰의 총수는 재야보다는 재조직에서 대부분 낙점됐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권재진(56·사시 20회) 서울고검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고검장, 대검 차장을 거쳐 올해 1월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뛰어난 친화력에 사안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돋보이며 원칙에 충실한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시 20회 출신으로 권 고검장의 동기인 명동성(56·법무연수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담백하고 합리적인 성격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워 호남(강진) 출신이어서 지역 안배를 우선 고려한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1997년 말 대선 국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연관됐던 'BBK 의혹' 사건을 맡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시 21회에 선 문성우(53·광주) 대검 차장과 김준규(54·서울) 대전고검장, 문효남(54·부산)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 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총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 문 차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차관을 거쳐 올해 1월 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수사는 물론 법무행정 분야까지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선·후배 및 동료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데 법무부 검찰 3·2·1과장과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 인사와 조직 등 행정 업무에 누구보다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고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지내고 올해 1월 대전고검장으로 임명됐다. 문 고검장은 대검 감찰부장, 대구·의정부지검장, 대전고검장을 거쳐 역시 올해 1월 부산고검장이 됐다. 총장 후보군인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공통점이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 바닥쳤다"

OECD "경기 회복 속도 가장 빠를 것"

한국 경제가 이미 바닥을 쳤으며 경기 회복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서 한국의 3월 CLI가 96.8로 전달의 94.6보다 2.2포인트가 증가하면서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치 자체보다 증감률에 의미가 있는 CLI는 산업활동동향, 주택동향, 금융·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통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주로 CLI가 100 이상에서 증가하면 경기 광장, 감소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하며 100 이하에서 CLI가 증가하면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CLI가 작년 4월 100.4까지 기록했으나 그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경기가 급락하면서 10월 90.7, 11월 90.8, 12월 91.4를

기록했다. 이어 1월 들어 CLI가 92.7을 찍고 2월에는 94.6으로 전월에 비해 1.9포인트나 늘면서 OECD 회원국 최대 회복 속도를 보였는데 3월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 것이다.

OECD는 "회원국 전체적으로 강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프랑스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 강한 경기 하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CLI가 전월 대비 증가한 국가는 한국(2.2포인트)을 포함해 터키(1.4포인트), 멕시코(1.3포인트), 프랑스(1.1포인트), 핀란드, 폴란드(0.9포인트), 이탈리아(0.8포인트), 영국(0.3포인트), 뉴질랜드(0.2포인트), 덴마크(0.1포인트) 등 10개국 뿐이다.

특히 한국은 CLI가 2월 대비 2포인트 넘게 급증해 29개 회원국 중에 압도적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돼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4일 오전 문성우 대검차장이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당분간 문성우 대검차장이 총장직무를 대행한다.

/연합뉴스



자연의 그림자를 들어 무리검을 살피는 흐지 퀸스랜
그 푸른빛과 같은 편향에의 대립

2009. 7. 1 WED 8:00PM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전연보 | 062-770-0551, 1588-0756 | 대극장, 미술관, 콘서트, 티켓팅

광주문화예술회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0 | 웹사이트: www.gwca.or.kr